

선미촌 성매매여성 자립 여건 조성

전주시, 폐쇄·정비 따라 자활 지원 조례 제정

전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탈 성매매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60년 동안 닫혀있던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열린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서난이·양영환·이완구·이병도·오정화·김남규·오평근·허승복·이명연·김윤철 의원 10인 발의로 제정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는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

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됐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장과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 골자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선미촌 탈 성

매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주거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 탈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도 마련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과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 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보강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이다. 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단체·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

사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4년 2월 '선미촌 민간협의회'를 발족, 국내 최초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재생을 통해 인권·예술공간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선미촌 문화재생의 핵심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자활을 돕는 일"이라며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탈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회복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곳곳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효자지구대, 훼손 방지위해 24시간 순찰에 총력

▲"난, 안철수가 싫어요" ... 70대 노인 형사입건

70대 노인이 대통령선거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가 싫다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21일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평화동 소재에서 대통령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74, 여)씨를 형사입건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스터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서신동 소재의 서일초 근처에서는 50대 여성이 벽보 중간에 갈려있던 대통령 후보 홍보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신고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길가에 붙여진 벽보도 훼손됐다. 기호 12번부터 15번까지 찢겨져 땅에 떨어졌다.

해당 벽보는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효자지구대, 선거벽보 훼손 방지를 위해 순찰강화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벽보 훼손행위 방지 순찰활동에 24시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대는 완산동,효자1~3동을 관할하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벽보 49개소가 설치돼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상대후보의 선거홍보를 훼손 가능성이 커져 특히 심야와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순찰을 강화해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에 대한 훼손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규 지구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포스터를 철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문재인·유승민 후보 포스터에 빨간 래커가... 익산에서도 대선 벽보 훼손

익산에서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마을에서는 대선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포스터에 빨간색 래커가 뿌려졌다. 이 벽보는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전북경찰 근무부장 '노타이'

전북경찰이 네티어를 매지 않는 '노타이(mo-tie)' 차림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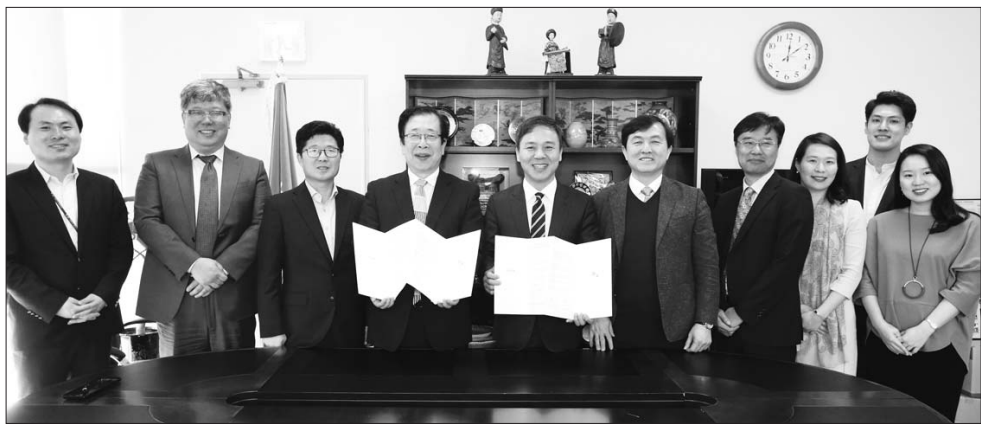
지난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교통경찰관이 착용하던 넥타이를 풀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식행사를 제외한 일상 근무, 외빈 경호, 일반 행사 때는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타이 시범운영은 종료일을 정하지 않아 현장 반응에 따라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노타이 열풍은 더운 날씨에 체온을 내려주고, 허례허식을 벗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국제문화유산 전문인력 초청 사업 협약

전주시는 21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전주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문화유산 전문인력 초청 프로그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갖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허근 사무총장은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전북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진수당 회의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박성구 전주덕진경찰서장,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전주 덕진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되는 유학생 자율방범대는 전북대에서 공부하는 26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정해은 기자

김승수 시장, 거버넌스 리더스 포럼서 '자치분권' 주제 강연

전주시 정책 소개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40·50대 전문가 클럽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의 미래발전 활로를 찾기 위한 전문가 단체의 초청은 여시재(2회)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시장은 22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거버넌스리더스 포럼에 초청돼 '자치분권, 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사람 중심의 전주시 정책들을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시민사회, 기업 전문직 등

40·50대로 구성된 (사)거버넌스리더스클럽이 주관하는 이 포럼은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와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이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직선보다는 곡선이 살아있는 도시, 대기업 쇼펄보다는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등 정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시가 혁신적으

로 추진 중인 거버넌스 정책인 '다들 마담' 사례를 설명했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담"을 뜻하는 다들마담은 주요협인과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의 총칭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월 여시재 신년이사회에 강사로 초청돼 '도시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지난 19일에는 매일경제신문과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헌재)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들과 석학들이 참여하는 '신명명 미래도시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근 기자

탄소산단 조성 예타 본격화

전주시, 조사 의뢰서 KDI에 제출 연말까지 시행여부 결정

미래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재추진된다.

예타를 통과해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국내·외 탄소기업들이 집적화돼 전주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고, 연간 1,9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가 용역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KDI는 20일 전주시 풍산동 일원 탄소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산단 조성

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 등을 조사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와 사업 시행처인 LH는 예타를 통한 비용편익(B/C)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 각각의 기준치인 1.0과 0.5 이상으로 상향되도록 기획재정부와의 사정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했다.

대표적으로, 산단 조성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산단조성계획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던 만큼, 올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